■與 '당헌개정 효력정지' 파장과 전망

비대위 권위 타격… 통합신당 삐걱

강경 신당파 중심 '선도 탈당론' 부상

열린우리당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극심한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현 비상대책위원회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내달 14일 치르기로 했던 전당대회 조차도 열릴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다. 또 탈당 도미노 현상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개정된 당헌을 기초로 대의원 선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열린우리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당헌개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비대위가 개정한 당헌 자체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날 의원총회 등을 개최, 가처분 인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앙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당헌 개정을 재추인 받아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쉽지 않다. 중앙위원 재석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당 사수파 성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과거의 당헌대로 기간당원제를 토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전당대회를 통합신당 추진 발판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당파 의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전대 준비위가 제시한 지도부 합의 추대 방안에 대해 당 사수파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인용 파문은 탈당 및 분당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미노 탈당 사태와 관련, 염동연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20일을 전후해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염 의원의 탈당이 이뤄지고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호남 출신 의원들과 친 고건파 의원 등이 우선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이후 호남권 의원들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질서있는 정계개편을 통해 통합신당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중진의원들이 탈당을 적극 만류할 가능성이 높아 탈당 행렬의 현실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통합신당의 대상과 주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탈당은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당 도미노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분노는 담장을 넘고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 북송 사건과 관련, 19일 오전 외교통상부 후문에서 국군포로 가족모임,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항의시위 도중 한 여성 시위자가 담장을 넘어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북송 국군포로 가족 1명 北보위부 조사 받던 중 사망

지난 해 10월 중국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9명 가운데 1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북소식통은 "북송 가족 중 노인 1명이 한 달 전 보위부에서 동사(凍死)했다"면서 "현재 나머지 가족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숨졌다는 노인은 국군포로의 부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망한 가족이 고령으로 애초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보위부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은 불투명하다.

소식통은 또 "가족 전원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며 "일부 노약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9명은 2명, 3명, 4명 등 세 가족으로 이뤄졌다.

한편,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선양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탈북자들의 성공적 귀환에 도움이 될 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는 국군포로 가족의 신병을 인계 받은 후 북송된 데 책임을 지고 중국과 북한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 책임을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군포로 3명의 북한 내 가족 9명은 지난해 10월 탈북해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에게 인도됐으나 총영사관에 진입하기에 앞서 영사관측이 알선한 민박집에 투숙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됐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했었다.

/연합뉴스

검찰, 광주 세하지구 자료 유출 수사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19일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구청에 세하지구 개발예정지 내에서 최근 6개월간 이뤄진 건축허가 또는 신고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국세청과 경찰의 수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도면 유출'에 치중돼 있는 만큼 땅투기 여부 등 투기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 세하지구 일대는 28만평의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평당 20만원 안팎의 땅값이 100만원으로 껑충 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이에 따라 경찰과 국세청이 최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강국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속에 지난해 9월15일부터 계속된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127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논란을 빚었던 이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및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중적인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해명과 함께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명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억 이상 주택담보대출만 DTI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앞으로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 능력지표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DTI는 40~6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심사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장상 민주당 대표 "與 대통합신당 참여 않겠다"

민주당 장상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합신당은 실정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실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 20일 전후, 늦어도 4월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 후 광주시당과 전북도당에서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光日만평

- 김종두

올해도 각자 알아서 끌고 가란다

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달, 보완책 서둘러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21일로 한 달을 맞는다. 시행 초기의 극심한 혼란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용객도 평균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하철과 마을 버스의 교통분담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이 한층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 한정된 버스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지역 간 시내버스 노선의 불균형과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인한 환승 불편,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등 부작용도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장로, 금남로, 황금동 등 구도심권과 양동시장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크게 줄어 이곳 상가의 매출이 시행 이전에 비해 30~40%나 떨어지는 등 구 도심권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인 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끊겨 이동수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불규칙한 배차간격 때문에 빚어지는 환승 불편도 큰 문제다.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무너져 평소 20~30분이면 될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화순과 나주 등 광주 인근 시·군과의 연계성, 환승이 어려운 노약자에 대한 배려, 서비스 수준 향상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광주시는 시행 한 달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反기업정서 개선 분위기 보다 확산돼야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호감지수는 50.2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점을 넘어섰고 첫 조사를 실시했던 2003년 12월의 38.2점보다 크게 높아졌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반기업정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내용적으로도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기업활동의 우선순위가 이윤창출이라는 의견이 첫 조사 때의 53.5%에서 57.3%로 높아진 반면 사회환원이라는 의견은 46.5%에서 42.7%로 낮아졌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富)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19.1%에서 32.9%로 높아졌다. 기업의 존재이유가 이윤창출이라고 할 때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첫번째 과제로는 고용창출(59.7%)을 꼽았다. 경영투명성 제고(19.3%), 사회공헌 활동(10.8%)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윤리적 경영이나 경영권 세습, 근로자에 대한 희생 강요 등에 따른 반기업정서는 여전하지만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기업인들은 국민들이 기업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대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전남도 실·국장급 10명 인사

도의회 사무처장 고영길

전남도는 19일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2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도의회 사무처장에 교육 복귀한 고영길 이사관이 임명됐다. 행정혁신국장에는 김재곤 여수부시장이, 경제과학국장에는 양복완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관광문화국장에는 주동식 부이사관, 해양수산국장에 김갑섭 경제과학국장, '서남권발전추진단장'에는 박내영 도의회 사무처장이 각각 발령됐다.

신설된 '관광투자유치 정책보좌관'에는 정인화 부이사관이 배치됐으며, 최오주 관광문화국장은 여수시 부시장으로 전보됐다.

배용태 행정혁신국장과 김동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세종연구소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입교하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섬·해안선 개발, 신 동력산업 유치,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준 국장급 및 4급 부시장·부군수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예총 회장에 최규철씨 선출

제7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 최규철(53·사진) 후보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19일 광주문예회관 르네상스홀에서 열린 이번 선거에서 최 후보는 55표 가운데 과반수인 28표를 획득, 21표를 얻은 김태욱(58) 후보와 6표를 얻은 박윤모(53) 후보를 누르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조각가이자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인 최 신임회장은 한국조각협회 전남지부장,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광주예술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철·정혜경·조일성·임관표씨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이대휴·최동일씨를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